

‘최장지각·尹 불참’ 국회 개원식… 우원식, ‘민생 회복’ 강조

(국회의장)

1987년 민주화 후 첫 ‘대통령 불참’ 우 의장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의정갈등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개헌 국민투표·선거제도 개혁안 마련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속에서 열렸다. 여야의 공방 속에 ‘지각’ 개원식을 연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과제를 제시했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새 국회 출범 직후 열렸어야 했으나, 원 구성 협상과 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추진 등으로 여야가 극심한 공방을 벌여 연기됐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밀린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여야 대표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면서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국회 개원식을 열게됐다.

개원식 방청석엔 제헌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유족, 고려인 후손, 환경기본권 헌법소원을 낸 기후소송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인,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가족, 장애인, 의료현장 종사자 등이 초청받아 자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 개원식 때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한 바 있어, 개원식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이 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과 체감경기는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 80%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

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이다. 답장 안, 책상 앞에서 보는 민생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에 국회의 역할이 있다”면서 “현장이 국민이 사는 현실이고, 바로 그자리, 민생현장 어디든 국회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의료대란으로 번지는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의정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치개혁과 연금개혁처럼 우리 사회의 묵은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미래의 주요 현안인 기후위기, 인구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을 고치는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까지 실시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라며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며 “거듭 강조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22대 첫 정기국회는 4~5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하고 9~12일에 국무총리와 부처 수장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한다. 9월 26일엔 정기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며, 10월 7~25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후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이어진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혁신당, 10월 재보선 경쟁

우군관계 악화일로 vs 제3지대 정당 역할… ‘의견 분분’

전남 영광·곡성군 쟁탈전 예고 혁신당, ‘지민비조’ 기류 벗어나 ‘경쟁적 협력관계’ 긍정 평가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재보선)에 나설 가운데 양당 관계가 그동안의 ‘밀월’에서 멀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것은 독자 노선을 걸겠다는 것으로, 자칫 양당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 정당으로서 내세운 당연한 전략이란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네 군데 지역(전남 영광·곡성군,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중 전남 영광·곡성군에서 경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해당 지역의 재보선 경선 후보 4명을 확정했다. 여기에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 장기소 영광군의회 의원,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 장현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이 후보에 올랐다.

혁신당은 오는 4일까지 출마 후보자를 접수하고 5일 면접 심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줄곧 ‘협력적 경쟁 관계, 경쟁적 협력관계’라며 양당은 우군 관계임을 보여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 일각에선 혁신당에 대해 이번 전남 영광·곡성군에서의 펼쳐질 양당의 경쟁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4·10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혁신당)를 선언했던 혁신당이 10월 재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마친 뒤 가진 기념촬영 전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선 출마의사를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혁신당이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것처럼 향후 2026년 지방선거와 21대 대선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이어간다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어둡다는 전망이 있지만, 제3지대 정당으로서 민주당과의 ‘경쟁적 협력관계’를 위한 전략을 내세웠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혁신당의 10월 재보선 후보 출마에 대해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민하 평론가는 혁신당의 재보선 출마가 완벽한 제3지대 정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잠점이 있는 전략인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10 총선 결과는 거대 양당 체제가 더 두드러진 만큼 현재 정치 환경

에서 혁신당이 제3지대 정당으로 거듭나기엔 어려운 동시에 민주당과 차별화를 둔 정당이 되기엔 어려울 거란 설명이다.

김민하 평론가는 10월 재보선 이후에도 혁신당이 ‘지민비조’ 기류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는 지방선거, 대선 등 추가로 봐야 할 지점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혁신당의 10월 재보선 출마는 제3지대 정당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정당이 존속하고 지속가능하려면 선거에서 검증을 받고 당선자를 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인재가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강하겠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혁신당의 호남 10월 재보선 경쟁에 대해 ‘경쟁적 협력관계’라고 평가했다.

혁신당도 민주당과의 호남 10월 재보선 경쟁이 오히려 생산적이라는 입장이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전남 곡성·영광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가 경쟁한다고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은 적다”며 “혁신당이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하니 민주당이 긴장하고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내려고 노력한다. 이전에 없던 긍정적 변화”라고 10월 재보선 출마 취지를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혁신당의 ‘지민비조’ 선언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4·10 총선 때 혁신당이 얘기했던 건 윤석열 정권과 모든 지역에서 1대1 구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재보선 경쟁으로 인한 양당 간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은 일찌감치 지난 총선에서부터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확고한 협력과 생산적 경쟁 관계라고 얘기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류제성 후보를 내세울 계획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는 민주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윤도현 기자 yunb0611@

‘尹 측근’ 김용현 인사청문회 與野, 대통령실 이전 등 공방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자체 핵무장론·계엄 준비 논란 등을 후보자에게 질의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용현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총암고 1년 선배이자,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엔 대통령 경호처장직을 맡았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이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에게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직경 420m 내에 위치해 ‘무방비 밀집 노출’로 대통령의 유사시 생존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국민께 공약하고 실천해오신 것”이라며 “그런데, 모두 실패했다. 실패하신 것을 디딤돌 삼아서 지금 윤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해 논란이 된 정부의 계엄 준비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설령 계엄을 해야 할 사안이라도 국회 과반수의원이 요구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